



# 국가 안전 大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

2014. 8. 26

국민경제자문회의  
산업연구원





# 목 차

- I 국민 안전사회 요구 상승
- II 국민 참여 국가 안전 大진단 추진
- III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
- IV 안전산업의 미래 비전

### ▶ 최근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

\*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('14.2), 세월호 침몰('14.4),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('14.5), 대형 싱크홀 발생('14.8) 등

### ▶ 교량 · 터널 ·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전

\* 국가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: ('14) 9.6%(1,864개) → ('24) 21.5%

### ▶ 우리나라 안전사고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

\*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.5명(2012년), OECD 평균 1.1명의 2배이며, 칠레 다음으로 2위

\* 산재로 인한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 10.1명(2009년)으로 OECD 국가 중 3위

\* 인구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OECD 국가 중 2위

### ▶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 안전사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 급증

\*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현상이 급속히 확산

⇒ **국가 안전 혁신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**

## 〈참고1〉 안전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

### 높은 안전요구

- 시설물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5.3점으로 선진국(7.8)보다 **크게 낮다고 평가**
-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**투자 필요성에 대부분(97.2%) 공감**

### 낮은 안전의식

-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평가
  - \* 2007년 30.3점에 비해 크게 하락
  - \* 여성, 고령, 고소득층 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
- 생활 속 안전의식 실천이 미흡, 특히 **20대 · 학생층 취약**
  - \* 승용차 뒷좌석 '안전벨트 미착용' (67.5%), 비상구가 없는 노래방도 '그냥 이용' (81.9%)

### 미흡한 안전교육 실태와 높은 교육 수요

- 심폐 소생술, 소화기 사용 등 **실습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30~40%**
  - \* 화재 발생 시 대피능력 부족 31.7%, 특히 여성 · 학생 · 주부 취약
- 재난사고 예방 **교육의 필요성**에 대해 대부분(98.7%) 공감
  - \* 실제 교육 참가 경험자는 36%에 불과

( '14.7.31.~8.12., 20세 이상 성인남녀 1,000명 대상 전화 설문, 현대경제연구원 )

## 1

## 기본 방향

## ▶ '쏠 국민'의 참여 하에 '사회 쏠 영역'을 점검하는 '대한민국 안전 大진단' 실시

- 정부 중심의 부분적 안전진단에서 탈피, 민간의 창의와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'국민 참여형 모델' 도입
- 참여도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App 등 ICT기술 활용
- 중앙-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대응에 중점

▶ 안전 大진단을 통해 국가 안전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,  
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써 안전산업 육성기반을 마련

- 시설 보수 · 보강 수요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유발
- 안전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
- 불합리한 기준 정비 등 안전 관련 법 · 제도 선진화

안전산업의 시장 기반 확대

## 〈참고2〉 국가 안전 大진단과 안전산업 육성



## 2

## 추진 방법

진단  
주체

- ▶ 국민 참여를 통한 '집단지성' 활용 : 신고 · 제안 중심의 Bottom-up 방식
- ▶ 민관 합동 안전 大진단 T/F 구성 : 진단 · 권고 위주의 Top-down 방식

진단  
대상

- ▶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안전 전 분야를 Matrix로 Cross-check
  - \* 시설별 : 교량, 건축물, 교통수단 등
  - \* 대상별 : 시설 · 수단별 종사자, 여성 · 노인 · 장애인 · 아동 등
  - \* 상황별 : 화재, 재해, 재난 등

정보  
수집

- ▶ 신고 편의를 위해 중앙 · 지방 정부의 안전 App, SNS 등 모든 채널 활용
  - \* 전화, 스마트폰 App(안전디딤돌 등), PC 홈페이지, SNS 등 정보 수집

결과  
도출

- ▶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적용
  - \* 사업의 우선 순위 도출, 예산 산정 기초 마련 및 법 · 제도 개선 반영
  - \* 大진단 전 과정을 '국가 안전 백서'로 발간

파생  
효과

- ▶ 안전 현장조사, 진단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- ▶ 시설 진단 · 유지보수 사업, App · 시스템 개발 등 ICT분야 관련사업 수요 확대

## 3

## 세부 추진 과제(안)

## ▶ 안전 大진단 T/F 구성

- \* 민관 합동(공동위원장)으로 안전행정부 또는 국가안전처 중심으로 운영
- \* 大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, 진행상황 모니터링, 분야별 제도개선 권고 등

## ▶ 중앙·지방간 협업체계 구축

- \* 중앙 :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(총괄), 각 부처 상황실 구성·운영
- \* 지방 : 시도 및 시군구 현장기동반 구성·운영

## ▶ 인력 /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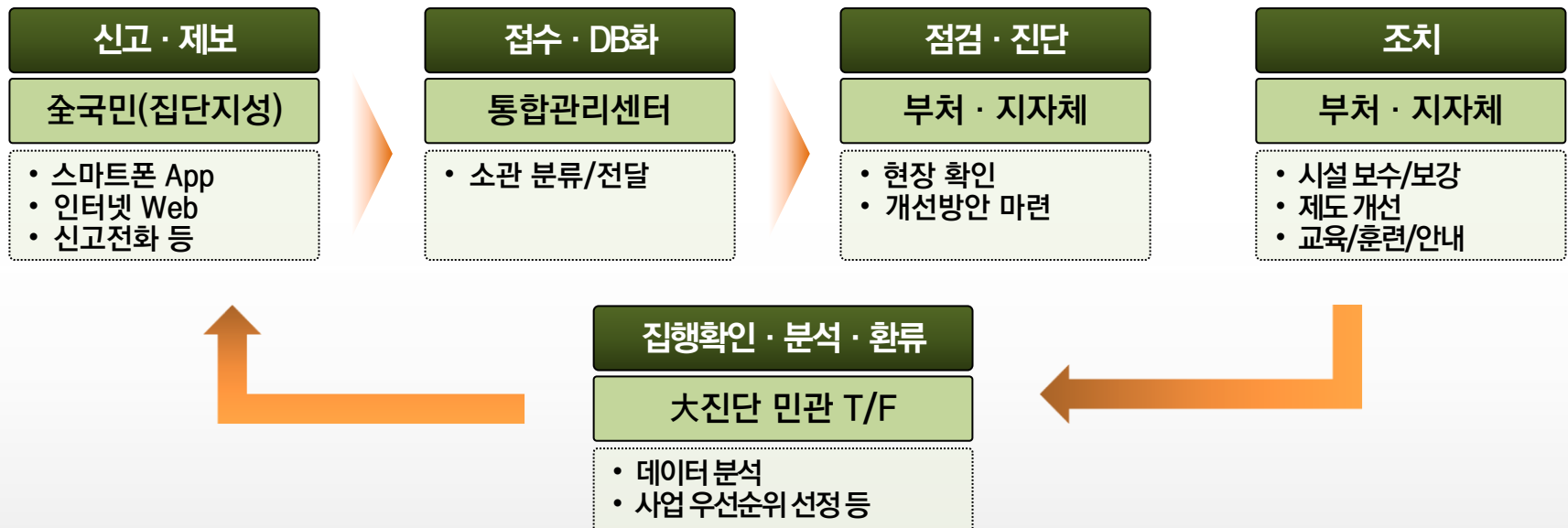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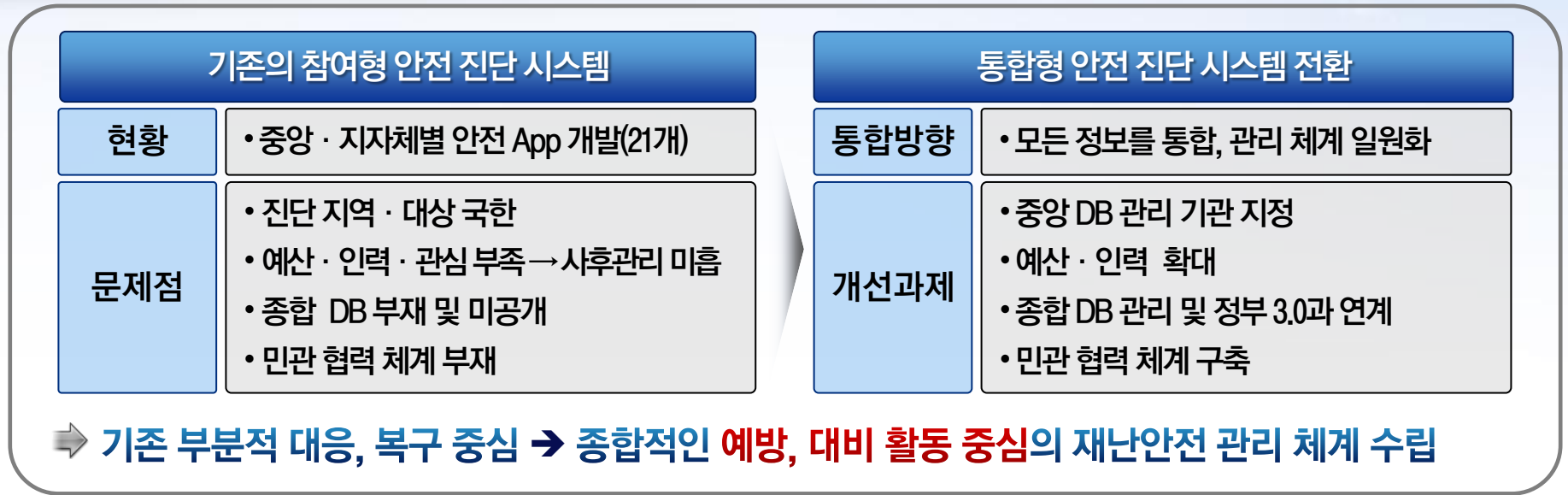
- \* 인력 : 소요 산정 후 중앙(직제 개정) 및 지방(지자체 인력)에 반영
- \* 예산 : 중앙(예비비 및 특별교부세), 지방(자체 자원) 활용

## ▶ 시스템 연계·운용 및 통합시스템 구축

- \* (올해) 기존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재된 21개 프로그램 간 연계망 구축  
(예)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(안행부), 안전디딤돌(소방방재청), 서울안전지킴이(서울시) 등
- \* (내년 이후) 일회성이 아닌 국가 아젠다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ICT기반 '안전진단 통합시스템' 구축



## 〈참고3〉 ICT 기반 '안전 진단 통합시스템' 개요



# Ⅲ. 국가 안전투자과 안전산업 육성

## 1 안전산업 발전 여건

▶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욕구 + 국가 안전 大진단 시스템

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 창출 가능

\* 점검·진단 서비스, ICT융합, 시설물 보수·보강 및 건설, 안전 교육·컨설팅, 시설/행사 안전요원 등

▶ 다만, 안전산업의 특성상 초기 공공투자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

• 공공재적 특성(시장에 의한 과소 생산)과 높은 규제 의존성 등

### 〈 안전산업의 특성 〉

#### 공공재

- 국가·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
- 정부 정책의 필요성

#### 규제·공공수요 의존

- 정부 정책/규제 변화에 영향
- 공공수요가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

#### ICT/파생산업과 연계

- 국가 전반의 방재시스템과 ICT기술 연계의 중요성 대두
- 개인·기업 정보보안 요구 증가

## 〈참고4〉 안전산업 영역 예시

	기기 · 제품	서비스	ICT융합
방법	방법기기, 출입관리장치 등	시설/행사, 운반경비 등	홈 시큐리티 장치, U-City 방재도시 등
방재	소화설비, 방화 · 방염 자재, 방재로봇 등	구조물 진단, 재난교육, 손해보험 등	지리정보시스템(GIS) 활용 방재시스템
정보보안	보안장비, 정보보호 제품 등	정보보안 컨설팅, 보안 관리 · 운용 등	빌딩 종합 관리시스템 등
생활안전	안전운전 자동차 부품(스마트카), 안전 산업 설비 등	도로안전, 에너지안전 관리, 위해식품 안전도 인증서비스	실시간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

### Ⅲ. 국가 안전투자와 안전산업 육성

#### 2 우리나라 안전산업의 현주소

##### ▶ 높아진 안전욕구를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취약

###### 수요 측면

- 공공 SOC 투자는 신규투자 중심으로 **유지관리 지출 미흡**
- 공공부문에 비해 **민간 부문의 역할 제한적**
- 민간수요는 **법규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**을 맞추는 수준으로 시장 정체

###### 공급 측면

- 투자 부족으로 **안전 기술수준이 낮고 전문인력도 부족**
-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**영세기업 중심**의 산업구조

➔ 국내 안전산업의 취약점과 특성을 감안,

**선도적 공공투자 및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략적인 산업육성 필요**

## 3

##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과제

수요 측면 : 시장 형성 촉진		공급 측면 : 산업역량 강화		
①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유도	②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	③ R&D 확대와 인력 육성	④ 新 산업화와 해외진출 여건조성	⑤ 안전 금융·보험 산업 발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선도적 공공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투자 예산 확대</li> <li>• 학교 등 사회·생활 기반시설 우선투자</li> </ul> </li> <li>■민간투자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RTO/RTL 도입</li> <li>• 안전진단 등 민간기업 참여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기준·규제 선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기준을 글로벌기준으로조정</li> <li>• 안전규제 정비/보강</li> </ul> </li> <li>■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규 실행력 제고</li> <li>•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R&amp;D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 R&amp;D 투자 확대</li> <li>• 핵심기술 집중투자</li> <li>• 안전기술(산업) 분류체계 구축</li> </ul> </li> <li>■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단기·중장기인력양성</li> <li>• 대학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상품·서비스·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부구매 확대 및 테스트베드 지원</li> <li>• ODA 지원 활용</li> <li>•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상담 지원 등</li> </ul> </li> <li>■대·중소 파트너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기술개발 확대</li> <li>• 대·중소협력 모델 발굴을 통한 대기업 참여촉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의무보험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정 의무가입 확대, 벌칙조항 명문화</li> </ul> </li> <li>■민간 금융상품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 재난보험 개발</li> </ul> </li> <li>■안전투자펀드 활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질 없는 조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자</li> </ul> </li> </ul>

# 과제 1. 선도적 정부투자자과 민간투자 유도

## ① 선도적 공공투자자로 신규투자 유발

현황

- ▶ 1970년대 SOC 건설 집중, 3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

\* 30년 이상 시설물 비중 : ('14) 9.6% → ('24) 21.5%

- ▶ 신규투자 중심으로 유지·보수 투자에는 소홀

대책

- ▶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병행 : 『사후 복구』 → 『사전 예방』, 『비상 대응』 → 『일상 관리』

- ▶ 안전투자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

· 안전 대진단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설의 유지·보수 투자 비중 확대

- ▶ 학교 등 사회·생활기반시설물에 우선 투자

### 학교 시설투자 확대의 시급성

-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, 75.4%가 '학교시설'이라고 응답
-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나, 무상급식 등 정치적 사안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측면

\* 서울시 학교시설 전수조사('11.5)결과, 위험시설이 31동, 30년 경과시설도 332동(9.6%)을 차지

\* 반면에 서울시 학교시설 개·보수 예산은 지속 감소(천억원) : ('10년 이전) 4.6 → ('11) 1.8 → ('14) 0.8

# 과제 1. 선도적 정부투자자과 민간투자 유도

## ② 민간투자의 적극 활용

현황

- ▶ 시설 유지·보수 관리에 필요한 자원, 인력 등을 공공부분 자원으로만 충당하는 데 한계

대책

- ▶ 기존 시설은 RTO/RTL, 신규 시설은 BTO/BTL 등으로 민간투자 활용
  - \* 기존 신규건설(Build) 외에 보수·보강(Rehabilitate) 방식을 추가 도입
  - \* 현재 민간투자가 불가능한 우수저장시설, 사방설비 등 방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검토
  - \*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BTL 방식에 민간제안 허용 검토
- ▶ 안전관련 진단·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
  - \* 손해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 허용 등

## 과제 2.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

### ① 안전기준·규제 정비

현  
황

▶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·규제로 인해 수요 창출 등 사업 기반 조성에 걸림돌

대  
책

▶ 안전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되, 점진적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용성 제고

• 시설·제품·서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점검·보강

\* (시설) 소규모 공연장 등 다중 이용 문화시설 건축물 등록 전 안전검사 의무화

\* (제품)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

\* (서비스) 체육시설 안전요원 배치 기준 강화 등

• ‘안전등급제’ 적용 확대·공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안전기술 인증절차 간소화

\* (현행) 공공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도 비공개 → (개선) 폭넓은 안전등급제 적용 및 공시 의무화

▶ 제2차 정상화 과제와 연계,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

\* 안전 관련 현장 개선(53개) : 노후 위험 가스시설 정밀검사 확대 등

\* 안전 행정 개혁(20개) :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등

\* 안전 의식 제고(17개) :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 등



## 〈사례〉 안전기술 인증 실패 · 지연 업체

### 국내 안전기술 인증 실패 후 해외진출 성공 (분무식 스프링클러)



- ➔ 국내 중소기업이 독일과 합작으로 개발,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분무식 스프링클러
- ➔ 알프스터널 화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, 기존 살수식 스프링클러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 검증
- ➔ 독일 VDS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았으며, 유럽을 위시하여 해외 전역의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제품

**개별법에 따른 안전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, 국내 생산하고도 설치할 수 없음**

### 국내 안전기술 인증 취득의 어려움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 상실 (투척식 소화기)



- ➔ 소방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제품수요 증대 예상, R&D 투자 등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
- ➔ 규제 시행초기 특정 기간에만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이나 관련 승인 및 인증 취득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
- ➔ 상대적으로 승인 및 인증이 쉬운 일본제품이 해당 시장을 선점

**제품개발 후 인증의 어려움으로 시장선점 곤란**

## 과제 2. 제도 선진화 및 법적 책임 강화

### ② 법적 책임 강화

현  
황

#### ➤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책임 미흡으로 안전투자 소홀

\* 안전관련 법·제도 준수를 위한 비용보다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및 손해배상액(피해액 범위 내)이 과소

대  
책

#### ➤ 안전 관련 법규의 실행력 제고

\* 안전사고 관련 처벌법규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(입법상 미비점, 행정감독상 문제점) 및 제도 개선

\* 법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

(예)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

#### ➤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

\* 고의·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자에게 손해전보액을 넘어서는 징벌적 의미의 배상책임 부과

(예)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·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

# 과제 3. 안전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인력 육성

## ① 안전산업 관련 R&D 확대

정책

- ▶ 정부의 안전 R&D 지원은 소규모, 단기과제 중심으로 산업화 관점 미흡
  - \* (예) 2014 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사업(22건)의 경우 평균 출연금 1.5억원, 지원기간 2년 이내
- ▶ 안전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 미비

대책

- ▶ 안전 R&D 투자 확대
  - \* 현재 3% 수준인 전체 R&D 예산 대비 안전 R&D 비중을 확대
- ▶ 산업 관점에서 센서, ICT융합, 생활안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
  - \* 센서기술 : 보안 및 안전 관련 핵심요소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센서에서 스마트 센서로 진화
  - \* 융합보안 분야(의료, 전력 등), 생활안전(먹거리 안전, 사이버 보안 등)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
- ▶ 안전 관련 별도의 기술(산업)분류체계 구축 → 국가 R&D사업 기획·관리에 활용
  - \* 녹색기술의 경우 '녹색기술분류체계'를 마련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R&D 예산편성 등에 활용

# 과제 3. 안전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인력 육성

## 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

연구  
현황

### ▶ 전문인력 수급이 체계적이지 않아 양질의 인력 확보에 애로

- \* 대학 · 전문대학 : 산업안전, 소방 등 법적 채용이 보장된 분야에 한정
- \*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: 4,500개에 약 10만 명이 종사하나 절반 이상이 비전문가

대책

### ▶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장 · 단기 인력양성

- \* 단기 : 국가 안전 大진단 관련 업종 퇴직자, 관련 학과 유휴인력 활용
- \* 중장기 : 청년 인턴제,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을 확충,  
건축 · 토목 · 안전공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의 안전분야 취업을 적극 지원

### ▶ 관련 학과, 국가기술자격 등 대학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 체계 마련

- \*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전분야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양성 지원
- \* 유지관리기능사, 유지관리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검토

### ▶ 초 · 중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실화

- \* 학교 표준 교과과정에 안전교육 반영
- \*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, 심폐소생술, 소화기 사용, 비상구 바로 알기 등 실생활 위주로 교육

# 과제 4. 안전 신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

## ① 안전 신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

현  
황

- ▶ 자금력, 마케팅 역량 부족한 영세 내수기업 중심으로 기술혁신,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한계

대  
책

- ▶ 안전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

\* 안전성을 공공기관 구매 관련 규정에 반영

- ▶ 중소기업 지원형 종합 '안전 랜드' 설치

\* 안전문화 + 산업홍보 + 재미를 결합한 체험형 테마파크 → 신제품 테스트베드로 활용

- ▶ 경제협력사업 등을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

\* (예) ODA를 통해 가스공사의 가스안전관리시스템 베트남 수출(2011년)

- ▶ 해외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상담회 등 개최

\* 안전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국,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 지원

→ 우리 강점인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안전 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이들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 개척

# 과제 4. 안전 신상품 · 서비스 · 시스템 개발과 해외진출 여건 조성

## ② 대 · 중소, 민관 파트너십 강화

### 현황

- ▶ 영세 규모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불가 → 대기업, 공기업 등과 파트너십 필요

### 대책

- ▶ 대 · 중소, 민관 공동 기술개발사업 확대를 유도 ('안전투자 펀드' 우선 지원)
  - \* 가스공사와 중소기업이 3:1의 비율로 6억원을 투입하여 LNG선 접안 및 계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('14년)
  - 향후 5년간 약 96억원의 수입 대체효과
- ▶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안전분야에 대해 대 · 중소 협력방식을 통해 허용

### 국가기관 발주 보안관련 시스템(SW) 입찰 시 대 · 중소 협력

- 대기업 입찰 제한으로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수주
  - \* SW산업진흥법상 국가기관 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
- 지속적 유지 · 보수 곤란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제약 등의 문제 대두
  - 대 · 중소간 공동입찰을 허용하되, 업체별 역할분담 · 사업대가 등 공개 의무화

## 과제 5. 안전 금융 · 보험 산업 발전

### 중점 과제

- 안전 관련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, 미가입 시 제재규정 미비
- 민간 보험 시장에서 안전위험에 대한 상품 개발 · 공급 미흡
- 안전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미비

### 대책

#### ➤ 의무보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
- \* 의무보험 대상 : (현행) 자동차 보험 등 26종 → (확대) 여객운송업자,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 등 추가
- \*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 시 벌칙조항 명문화
- \* 여신거래약관, 하도급 계약 등 각종 표준양식에 의무보험 가입을 명문화

#### ➤ 재난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민간 금융상품(재난보험) 도입 검토

- \* 재난시설의 소유자가 재난으로 타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험

#### ➤ 안전투자펀드의 활용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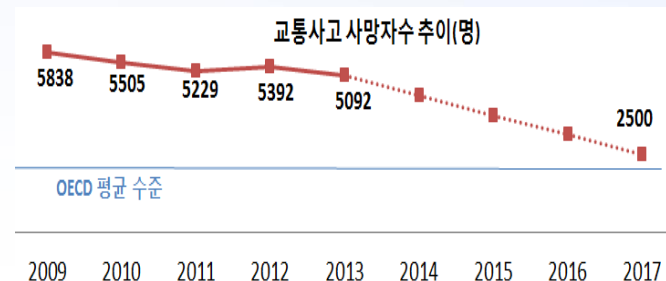
- \* 펀드의 조기 조성('15년, 3조원) 및 산업화가 용이한 분야에 집중 지원

## 1 국민이 안전한 나라

### ▶ 재난·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'안전선진국' 진입

- 3대 재난사고(교통, 산재, 화재) 사상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

\* (예)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현재의 50%수준으로 감소  
( '13) 5,092명 ⇒ ( '17) 2,500명



## 2 안전산업의 新성장동력화 (창조산업 영역으로까지 확대)

### ▶ 국내 안전산업시장이 현재 GDP의 0.4%수준에서 1%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( '13) 6.7조원 → ( '17) 17.4조원)

- 안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 이상

\*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안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(10.7조원)와 전·후방산업연관효과(19.5조원)를 합산

-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17만명

\*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안전산업 총산출 10억원 증가 시 13명 내외의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



**감사합니다.**